



법과 정치

1. 대의제와 직접 민주 정치

정답 ③

(가)는 대의 민주제, (나)는 직접 민주 정치를 나타낸다. 나.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민 투표나 주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일부 가미한 혼합 민주 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다. 로크는 대의 민주제를 바람직한 민주 정치의 유형으로 보았지만,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라.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기 쉽다는 한계를 가진다. 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가 행해졌다.

2. 대표 결정 방식의 비교

정답 ③

A는 다수 대표제, B는 비례 대표제, C는 소수 대표제이다. 나. 사표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다수 대표제에서 가장 높고, 비례 대표제에서 가장 낮다. 다. 소수 대표제가 다수 대표제보다 소수파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 라. 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다수 대표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다.

3. 정치 참여의 의의

정답 ⑤

제시문에서는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 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치 참여가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권 의식을 높이는 정치 사회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민법 원칙의 변화

정답 ②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 (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라.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르.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의 손해 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나. 계약 공정의 원칙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유 재산권 제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5. 민사 분쟁의 해결

정답 ③

③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가압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①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며,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④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의 한도 금액은 3,000만 원이다. ⑤ 약속어음에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었으면 소송 없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공증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6.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분석

정답 ⑤

⑤ 갑은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인 무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정이 저당권을 설정한 일자가 갑이 확정 일자를 받은 날보다 앞서므로 정은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이다. ① (가)는 갑구이고, (나)는 을구이다. ② 갑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의 ○○ 주택 소유자는 병이다. ③ 갑은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을 확보하였다. 갑이 1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2017년 7월 31일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무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 주택 소유자는 병이다.

7.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정답 ③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므로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분포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8. 근대 시민 혁명의 한계

정답 ⑤

제시된 그림은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참정권이 재산권이나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었음을, 즉 제한된 민주 정치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9. 정당과 이익 집단

정답 ⑤

(가)는 정당, (나)는 이익 집단이다. ⑤ 정당은 공익 실현을,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정치 참여 주체는 아니다. ②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③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다. ④ 정당과 이익 집단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한다.

10. 헌법 개정 절차

정답 ③

나. 헌법 개정안 공고는 대통령이 한다. 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라.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르.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1. 미성년자의 계약

정답 ③

나. 을은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라. 갑이 미성년자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갑은 물론 갑의 부모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르.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2.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정답 ④

④ 공작물 점유자인 B는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 하였으면 면책되지만, 공작물 소유자인 A는 B가 면책될 경우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① 갑은 고의가 인정될 경우 손해 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직접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된다. ③ 공작물 점유자인 B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 공작물 소유자인 A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⑤ 갑은 동물의 점유자로서, B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무과실이 입증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3. 이혼의 유형

정답 ②

(가)는 재판상 이혼, (나)는 협의 이혼이다. 라.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 다.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모두 양육권을 박탈당한 쪽에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나. 협의 이혼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르.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4. 유언과 상속

정답 ④

나. A씨 어머니는 10년 전 이혼하였으므로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르. B씨와 C씨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4억 원이므로, 아버지의 유언 금액인 1억 원의 4배이다. 라.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말로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 유언이 무효이므로 A씨의 법정 상속분은 B씨, C씨와 같은 금액인 4억 원이다.

15. 미성년자의 보호

정답 ①

갑은 부모 등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므로 19세이고,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14세 미만이다. 병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라.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20세 이상이다. 나. 을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을, 병은 미성년자이므로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갑은 19세이므로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 형사 소송 절차

정답 ②

②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이다. ① 수사 개시의 단서로는 고소나 고발, 현행범 체포, 자수, 범죄 신고 등이 있다. ③ 구속 적부심은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 기관에 의해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기소에 의해 갑의 지위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뀐다. ⑤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부당 해고의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

정답 ④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부당 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①, ②, ⑤은 근로 기준법으로 사회법이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을 통합하는 제3의 영역에 해당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 구두로만 통보한 해고 등은 부당 해고이다. ⑤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해 그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8. 국제 사법 재판소와 안전 보장 이사회

정답 ①

라. 분쟁 해결 조정 요청 시에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이 아닌 임의적 관할권을 행사함과 관련된다. 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사법 판결 및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다.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거부권을 가지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 수단에는 군사적 제재도 포함된다.

19. 대표 결정 방식의 변화

정답 ①

20대 의회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25대 의회 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결합한 선출 방식을, 30대 의회 선거에서는 완전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① 25대 의회의 경우 지역 선거구 수를 알 수 없으므로 총선거구 수도 알 수 없다. ② 사표는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완전 비례 대표제에서 가장 적게 발생한다. ③ 소수당의 원내 진출은 완전 비례 대표제에서 가장 유리하고,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불리하다. ④ 25대 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 구 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권역별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행사한다. ⑤ 정당별 의석률과 득표율의 괴리 정도는 완전 비례 대표제에서 가장 작다.

20. 법원과 헌법 재판소

정답 ④

④ 헌법 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헌법 재판소는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② ㉠은 위헌 법률 심판을 가리킨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위헌 법률 심판 권한은 헌법 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 ⑤ 헌법 재판소는 정부의 제소가 있을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